



삼일회계법인

#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회복의 시동을 걸다

정책·외교·제도로 본 새정부의 전략과 과제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September 2025





## 들어가며

6월 4일 출범한 새정부는 100일 동안 저성장 전망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핵심 정책은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일명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 30대 선도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및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새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2026년부터는 인프라·인재·제도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및 산업·에너지 예산을 확대하고, 성장펀드를 통해 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에 장기·저리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대외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공급망·미래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원전·LNG·핵심광물·항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MOU가 발표되었다. 다만 관세 등 통상 세부 조건은 아직 협의 중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 제도도 빠르게 변화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세제 개편은 법인세율 인상, 거래세 조정, 대주주 요건 강화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R&D 및 첨단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노사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 정상회담 결과, 법·제도 개편 내용을 정리하고, 산업과 기업이 직면할 기회와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단기 실행과 중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핵심 대응 방향도 함께 담았다.

# Contents

<b>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산업 중심의 전략적 행보</b>	<b>04</b>
<b>1. 새정부 경제 비전과 계획: '국정과제', '경제성장전략'</b>	<b>06</b>
1) 국정과제	
2) 경제성장전략	
<b>2. 새정부 재정 계획</b>	<b>17</b>
1) 국가 재정 로드맵	
2) 2026년 예산안	
<b>3. 정상회담</b>	<b>19</b>
1) 한일 정상회담	
2) 한미 정상회담	
3) 한-베트남 정상회담	
<b>4. 세제개편안, 노란봉투법</b>	<b>23</b>
<b>5. 하반기 Focus</b>	<b>25</b>
<b>6. 결론: 시사점 및 제언</b>	<b>26</b>

#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산업 중심의 전략적 행보

-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0%대 저성장 전망과 미국발 고관세·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지난 6월 4일 공식 출범함.
- 출범 후, 약 100일 동안 새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경제성장전략 발표 등을 통해 경제·산업 중심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국내 경제·산업 관련 주요 타임라인 ('25년 6월~)



자료: 백악관,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 1. 새정부 경제 비전과 계획: ‘국정과제’, ‘경제성장전략’

-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100일간의 경제·산업 정책 행보는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이정표이자,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신호임. 이에 본 보고서는 새 정부의 초기 정책 흐름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이 직면할 기회와 도전 과제를 조망하고자 함.
- 분석은 아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과 기업이 직면할 기회와 과제를 정리하고, 단기 실행과 중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핵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1) **국정과제와 경제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제 비전과 실행 계획 검토
  - 2) 경제 비전과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 계획** 점검
  - 3)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의 관점에서 본 **미국·일본·베트남 정상회담** 내용 기반 산업 전망 진단
  - 4) **세제 개편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 진행 사항 점검
- 우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방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경제성장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두 정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추진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새정부 국정과제 VS. 경제성장전략

구분	국정과제	경제성장전략
발표일	‘25년 8월 13일	‘25년 8월 22일
작성 주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주도)
목적	새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 (5년간 국가 비전·목표·과제)	<b>국정과제 토대로 경제 분야 전략 제시</b> (중장기 성장 로드맵)
초점	국가 전반 (정치·사회·경제·외교·안보 종합)	경제 중심
주요 내용 (경제·산업 측면)	1) <b>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b> (AI+재생에너지+5극3특 지역 균형)  2) <b>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 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b> (ABCDE+2S*, 코스피5000)	아래 4개 축 아래 국정과제 내용 토대로 중장기 전략 제시:  <b>1) 기술선도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DE+2S*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식별 및 성장 계획 제시</li> <li>-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방안 제시</li> </ul> <b>2) 모두의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극 3특 지역 균형 고려한 산업 육성 전략 제시</li> </ul> <b>3) 공정한 성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전략 제시</li> </ul> <b>4) 지속성장 기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혁신 전략 제시</li> </ul>
유연성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 (정책 방향성 중심)	국정과제보다 규정화·실행 중심 (프로젝트·재원 계획 명시)

\*A(AI), B(BIO), C(Culture), D(Defense), E(Energy) + Semiconductor, Shipbuilding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 토대로 삼일PwC 경영연구원 분석

# 1-1. 국정과제 (1/5)

- 지난 8월 13일, 새정부는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함.
  - 국정과제란? 정부가 임기 동안 집중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산업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정과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초기 기획안이므로, 국정과제를 해석할 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핵심 키워드와 정책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정과제 중 절반 가량이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내용이며, 사회·외교·안보 분야 등도 '경제 성장'과 밀도 깊게 연결되어 있음.

## 새정부 국정과제 주요 내용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 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5대 국정 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②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실현 ③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① AI 3대 강국 도약 ②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③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④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⑤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① 자치 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② 활력이 넘치는 민생 경제 ③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④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② 내 삶을 돌보는 복지 ③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④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⑤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⑥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⑦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⑧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 국가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②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③ 세계로 향하는 실용 외교
123대 국정 과제	19개	29개	23개	37개	15개

## 식별

### 123대 국정 과제 중 '경제·산업 성장과 직결'된 과제는 59여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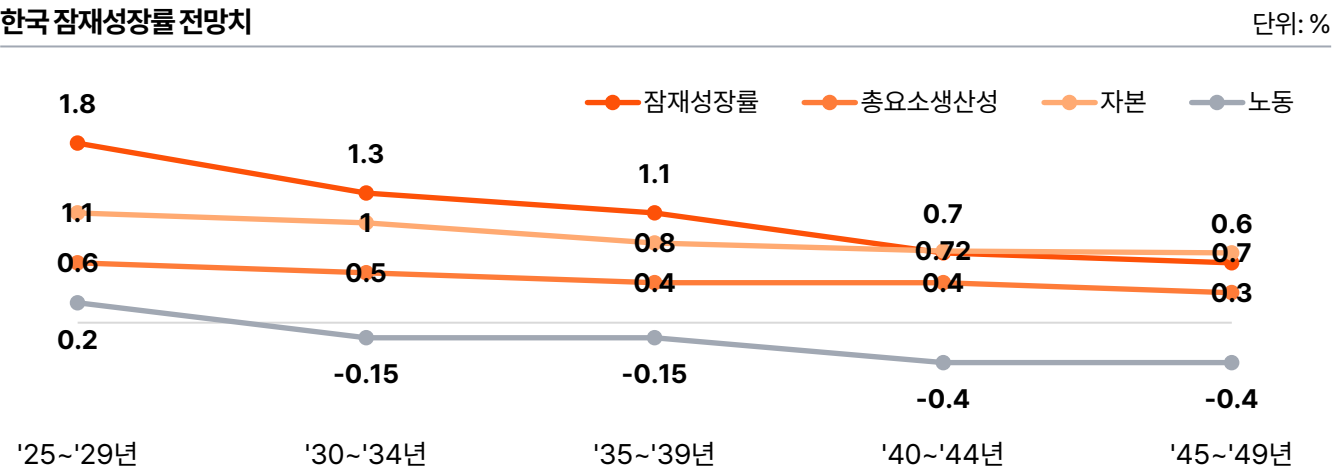
▶ 주요 산업별 과제 수(%)

AI·혁신기술 관련 11개 (9%)	에너지·ESG 9개 (7.3%)	금융 4개 (3.3%)	반도체·바이오헬스, K-컬처, 방산, 조선업 등 전략 산업 17개(14%)
------------------------	-------------------	--------------	---

자료: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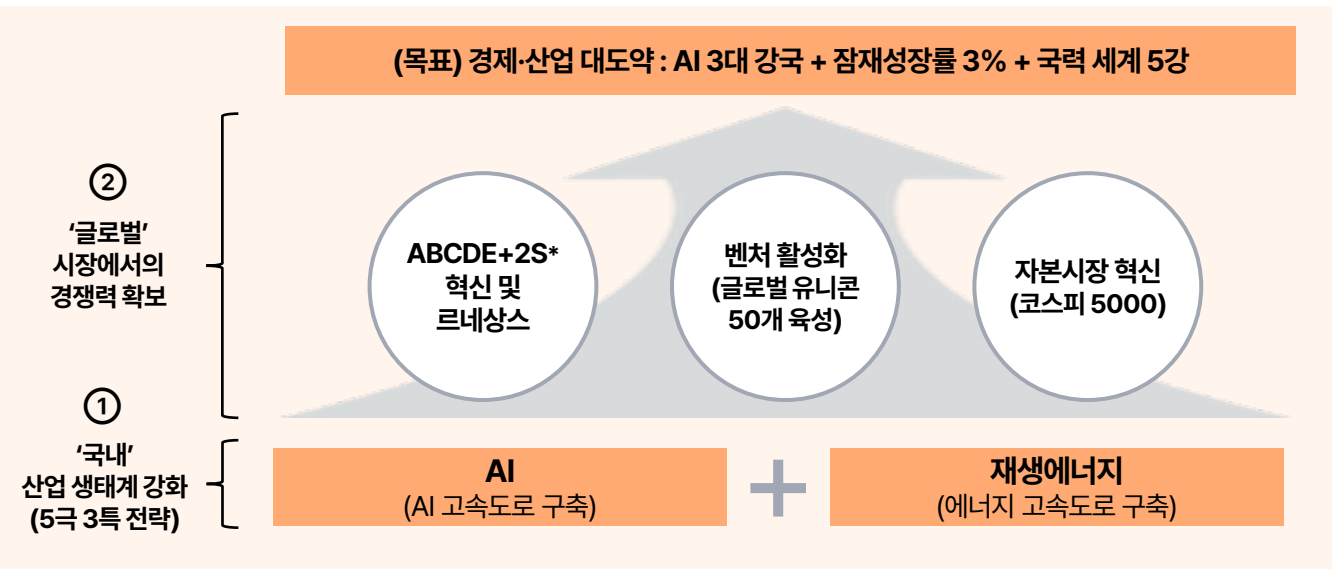
# 1-1. 국정과제 (2/5)

- 새정부가 국정과제에서 경제 성장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되면서 실물 경제로의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임.
  -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7.8%에서 2020년대 2%대로 떨어졌으며, 산업 구조 개혁 없이 현 추세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0%대 진입 전망됨.
  - 가계 자산 중 비금융 비중('21년 기준): 한국 65.2%, 미국 32.7%, 일본 36.4% (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새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회복, 국력 세계 5강'이라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며, 국정과제 전반에 이를 반영함. 특히, ①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와 ②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 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균형 있게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 산업 혁신과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임.



자료: 한국은행, OECD

## 국정과제를 통해서 본 새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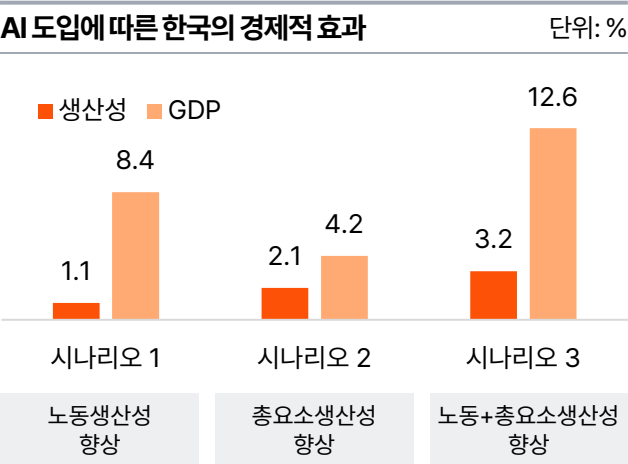


\*A(AI), B(BIO), C(Culture), D(Defense), E(Energy) + Semiconductor, Shipbuilding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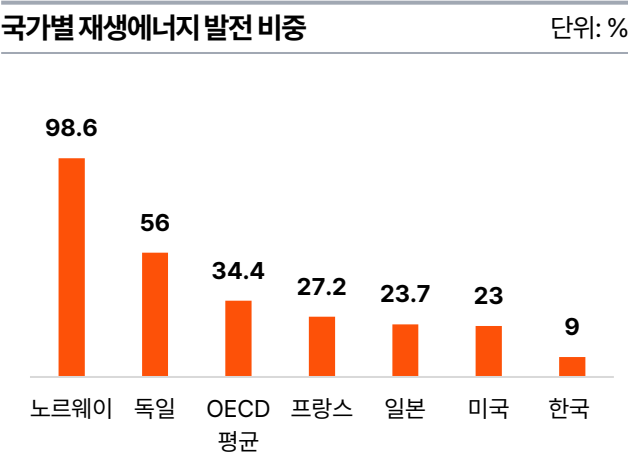
# 1-1. 국정과제 (3/5)

## ①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AI+재생에너지+5극 3특)

- 새정부는 한국 ‘안’에 ‘AI’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5극 3특별’ 성장 엔진 산업을 집중 성장시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 **AI 고속도로**: 첨단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전 산업의 AI 활용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해 고성능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
  -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30년까지 서해안, ‘40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잇는 전력망을 구축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산업이 안정적으로 고품질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5극 3특별**: 전국 단위로 구축된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고속도로)를 토대로, 수도권 중심의 기존 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5극 3특’ 체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
- 그럼 왜 새정부는 AI와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려는 걸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총요소생산성 향상\*이기 때문. 이를 위해 새정부는 전 산업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 구조를 마련해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AI 도입은 한국 경제 총요소생산성을 1.1~3.2%, GDP를 4.2~12.6%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 디지털 전환(DX)에는 성공했지만, AI 전환(AX)과 그린 전환(GX)이 지연되고 있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확대에 이여지는 데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전 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CBAM\*\*, RE100\*\*\* 등 탄소 무역 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로 OECD 평균(34.3%)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 균형을 고려한 안정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가 시급함.



자료: 한국은행, 'AI와 한국경제' (2025.02)



자료: IEA, 한국전력통계

**새정부가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국 경제는 '고속도로'와 함께 성장함.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는 물류 혁신을 이끌어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를 가능케 했고, 1990년대 말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는 '고속도로'가 정보 접근성과 통신 속도를 혁신하며 IT 강국으로 도약시킴.

→ 이에 새정부는 AI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이 분야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한 것임.

\* 잠재성장률은 경제 체력 지표로, 물가 상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의미함. 잠재성장률은 노동(생산연령인구), 자본, 총요소생산성을 토대로 측정되며, 이중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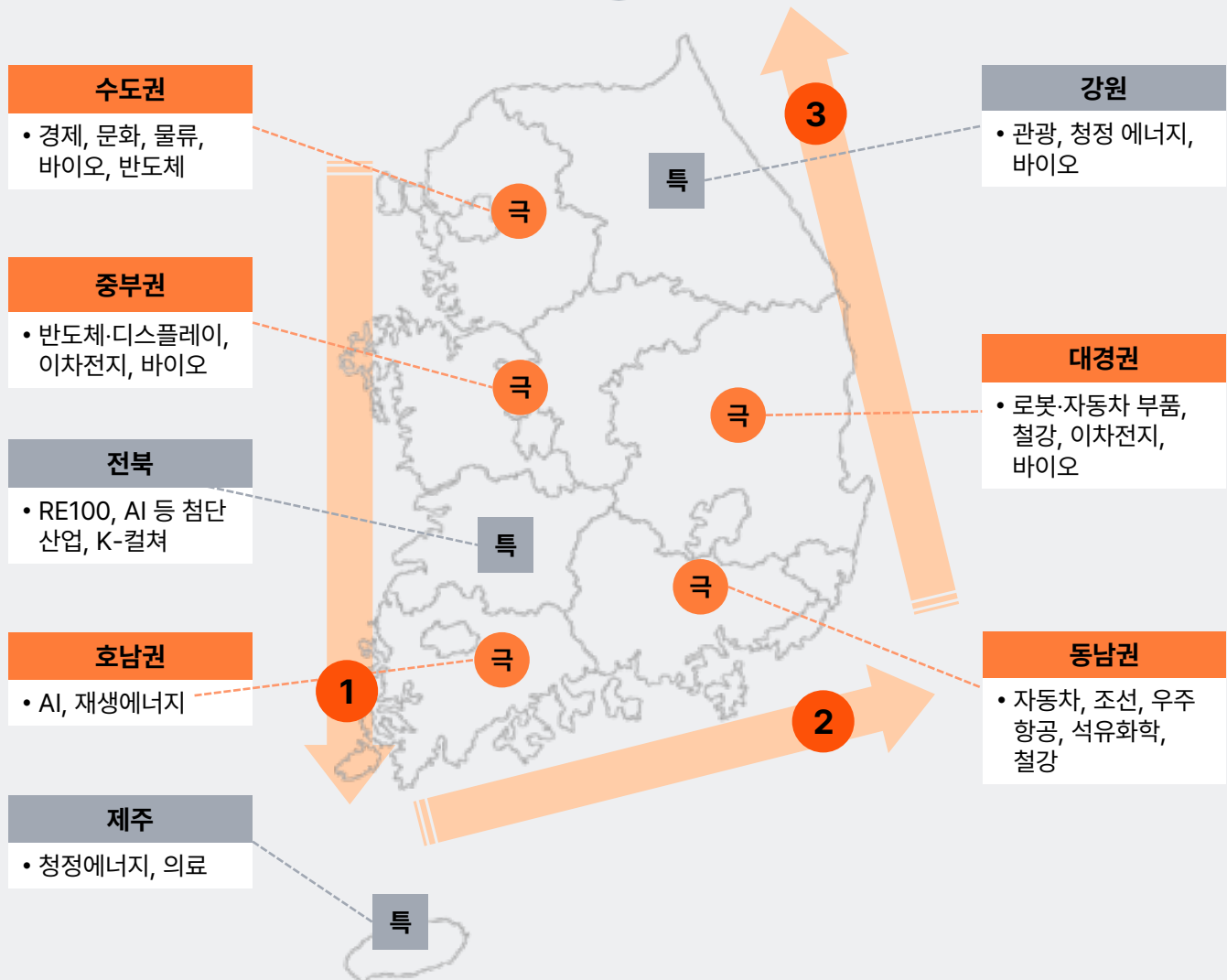
\*\*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유럽연합)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임.

(참고)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AI+재생에너지+5극 3특)

## AI 고속도로\* 구축해, 산업·지역 AI 확산

**\* 첨단 GPU 5만 장 이상 확보,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 기술·인재 확보, 산업·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



## 에너지 고속도로

## 1 1단계(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30년까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수도권 이동위한 해상 전력망 구축

## 2 2단계(남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40년까지 해상 전력망 남해·영남 원전 연계

### 3 3단계(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해상 전력망 동해까지 연결 → 강원·경북 지역 발전소와 동해 지역 해상풍력 연계

자료: 더불어민주당 공약 종합,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삼일PwC 경영연구원 재구성

# 1-1. 국정과제 (4/5)

## ② '전략 산업' 및 자본시장 혁신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1/2)

- 새정부는 ABCDE+2S\* 전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첨단 기술 인프라 확충과 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시장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임.

\* AI(인공지능), Bio-Healthcare(바이오·헬스케어), Culture(K-컬처), Defens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Semi-conductor(반도체), Shipbuilding(조선)

국정과제 주요 내용		삼일PwC 경영연구원 Insight	
		기회	도전
<b>A</b>	<b>A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스타트업 및 클라우드 기업 초기 진입 장벽 완화</li> <li>전통산업의 AI 기반 혁신 수요 증가</li> <li>AI 인력 채용 및 협업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자체 기술 확보 및 지속 투자 필요</li> <li>정부 주도 인프라 비중 확대 속에서, 민간 혁신과의 조화로운 연계 필요</li> <li>AI 윤리 등 규제 리스크</li> </ul>
<b>B</b>	<b>바이오·헬스케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진단 및 치료 등 신시장 창출</li> <li>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 제휴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시험, 인허가 등 시간·비용 장벽</li> <li>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의 기술·자본력 격차</li> </ul>
<b>C</b>	<b>컬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텐츠 산업의 대규모 성장 기반 마련</li> <li>연관산업과의 수출 시너지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렌드 변화 민감 → 지속적 혁신 필요</li> <li>저작권·수익 배분 문제 등 구조적 한계 존재</li> </ul>
<b>D</b>	<b>방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방산 수출 시장 확대</li> <li>AI·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스마트 국방 산업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기밀 유지가 기술 협력 및 해외 진출에 제약</li> <li>방산 관련 법령 및 인증 절차로 사업 속도 저하</li> </ul>
<b>E</b>	<b>에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풍력·ESS 시장 확대 및 투자 유치 기회</li> <li>ESG 경영 강화로 친환경 기술·서비스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전환 저항 및 비용 부담</li> <li>재생에너지 기술 내재화 및 인프라 구축 부담</li> </ul>
<b>S1</b>	<b>반도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전기차, 국방 등 고성능·고신뢰성 반도체 수요 급증</li> <li>R&amp;D 투자 확대 및 기술 내재화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요 변동성</li> <li>소재·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li> </ul>
<b>S2</b>	<b>조선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 방산 및 해양 에너지 산업과의 융합 기회</li> <li>정부의 선박 수주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해운 경기 변동성에 따른 수주 불확실성</li> <li>중국의 저가 공세 지속 및 인력 부족 문제</li> </ul>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재구성

# 1-1. 국정과제 (5/5)

## ② 전략 산업 및 '자본시장 혁신'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2/2)

- 새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를 높일 계획임.

자본시장 혁신 관련 국정 과제 주요 내용	
목표: 코스피 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li> <li>•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li> <li>•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li> </ul>

자료: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안),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발표 자료, 삼일PwC 경영연구원 재구성

- 자본시장 혁신의 일환으로, 새정부는 7월 22일 개정 상법을 공포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와 공평한 대우를 명문화함.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확대를 포함한 추가 개정안을 의결함. 이러한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통해 자본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계의 적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개정 상법(7/22일, 9/2일) 주요 내용			
항목	개정 내용	시행	기대효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li> <li>• 주요 변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 주주 이익 보호: 개별 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집합적으로 이익 보호</li> <li>2) 전체 주주의 공평 대우: 특정 주주나 지배주주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균등하게 고려</li> </ol> </li> </ul>	'25년 7월 22일	일반주주 권익 보호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독립이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사의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의무 선임 수 증원</li> <li>• 주요 변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이사</li> <li>2) 선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회사(자산 2조 미만): 이사 총수의 1/3 이상 독립이사 선임 (기준 1/4)</li> <li>-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 이상): 독립이사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확보</li> </ul> </li> </ol> </li> </ul>	'26년 7월 23일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및 경영 참여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시 최대주주의결권 3% 제한 적용</li> <li>• 주요 변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만 적용된 최대주주 3% 합산 룰을 감사 위원 전원에게 적용</li> </ol> </li> </ul>	'26년 7월 23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확대
전자주주 총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허용 및 전자주주총회 참석 시 소집지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li> <li>• 주요 변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 병행형 방식: 현장 개최는 필수이며, 전자 방식은 보조 형태로 운영</li> <li>2) 개최 의무: 일반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하며,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의무 개최</li> </ol> </li> </ul>	'27년 1월 1일	주주 참여 확대
집중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li> </ul>	공포일 기준 1년 후	소수주주의 선임권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정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해야 하는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li> </ul>	공포일 기준 1년 유예	감사 독립성 강화, 투자자 신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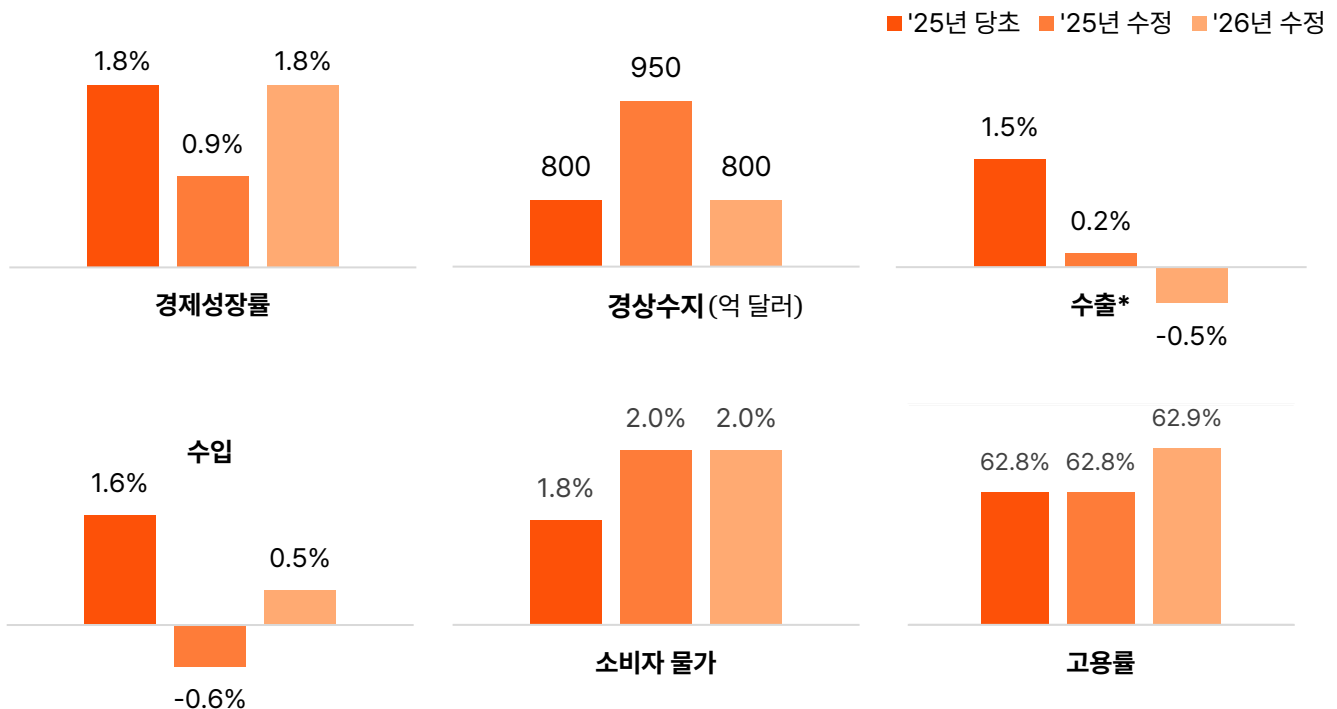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 1-2. 경제성장전략 (1/5)

- 지난 8월 22일, 새정부는 '국정과제'의 실행 로드맵인 '경제성장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앞서 8월 13일 공개된 국정과제는 국가 비전과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투자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발표함.
  - 무엇보다 경제성장전략은 단기 경기 하방을 막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즉, 기존의 추경과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현재 직면한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담은 전략을 별도로 제시한 것임.
-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① 기술선도 성장, ② 모두의 성장, ③ 공정한 성장,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이 중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새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과 성장 펀드 조성 방안을 함께 제시함.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과거 정부와 달리 새정부가 향후 집중할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분야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됨. 다만, 세부 실행계획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전략은 산업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 분야, 투자 방향, 인재 확보 등 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새정부와 산업계가 해당 전략을 기반으로 긴밀히 논의해 실질적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경고등 커진 한국 단기 경제 전망

전년대비



\* 통관 기준, 전년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1-2. 경제성장전략 (2/5)

## ① 기술선도 성장 (1/2)

- 새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의 첫 번째 축으로 '기술선도 성장'을 내세우며, 국정과제에 제시된 **ABCDE+2S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30대 선도프로젝트는 'AI 대전환'(15개)과 '초혁신경제'(15개)로 구성
  - **AI 대전환은 AI·데이터·로봇·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산업·공공·사회 전반에 확산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초혁신 경제는 첨단소재, 에너지, 바이오, 방산, K-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의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 새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하며, 2026~27년까지 인프라·인재·법제도 등 전방위 혁신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새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규제 혁신, 인재·데이터·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 역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사업과 신기술에 집중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30대 선도프로젝트					
AI 대전환 (15개)			초혁신경제 (15개)		
선도 프로젝트	상세 목표	국정 과제*	선도 프로젝트	상세 목표	국정 과제*
AI 로봇	범용·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A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화 및 국내생산 확대	A, S1
AI 자동차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A	LNG 화물창	화물창 기술 국산화	S2
AI 선박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	A, S2	초전도체	초전도 선재·자석 실용화·상용화	
AI 가전	가전에 AI 탑재 및 AI 홈서비스 확산	A	그래핀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전기차 케이블, 이차전지, 반도체 등)	S1, E
AI 드론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A, D	특수 탄소강	특수강 소재·부품 개발	
AI 팩토리	제조현장에 AI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	A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 기술 확보	E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	A, S1	해상풍력·HVD C	풍력터빈, 대용량 HVDC 개발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E
AI 복지·고용	AI 통한 지역·개인 맞춤형 서비스	A	그린수소·SMR	기술개발·실증지원 및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E
AI 납세관리	AI 통해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	A	스마트농업	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	A
AI 신약심사	AI 기반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	A, B	스마트수산업		
국내 AI 인재	전국민 AI 역량강화	A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우주기업 전용 펀드 규모 확대	D
해외 AI 인재	국경없는 인재 활용 및 2,000명 유치	A	K-바이오·의약품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국민성장펀드 등 활용한 신약 글로벌 상업화	A, B
공공 데이터	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 클라우드 전환 및 가명데이터 개방 확대	A	K-콘텐츠	투자 확대 및 게임·웹툰, 영상 등 대기업-중소기업 협동 기술개발	C
데이터 활용	국가 AI 데이터 표준 마련	A	K-뷰티	맞춤형 통합 클러스터 육성	C
국가 AI 협력	범국가 AI 연구·산업화 협력	A	K-식품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수출 확대 전략 추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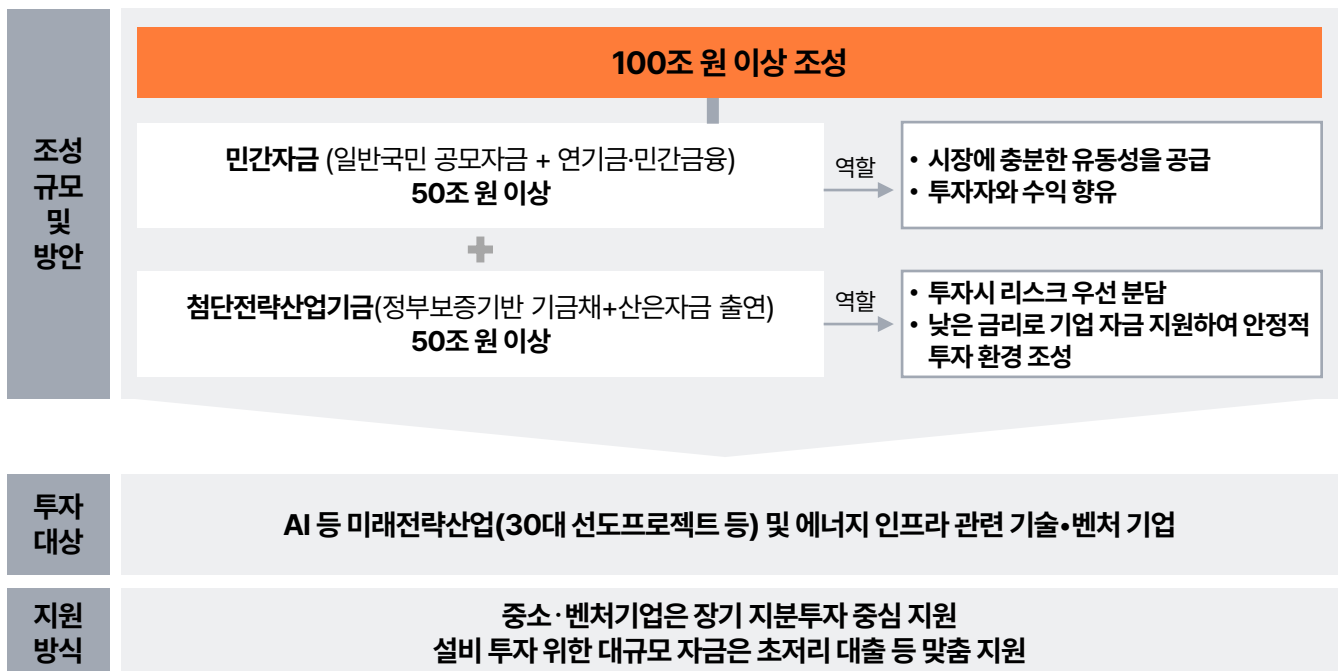
\* A: 인공지능, B: 바이오·헬스케어, C: K-컬처, D: 방위산업, Energy: 에너지, S1:반도체, S2: 조선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1-2. 경제성장전략 (3/5)

## ① 기술선도 성장 (2/2)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정부가 앞서 설명한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임.
  - 국민성장펀드는 연기금 등 민간 자금과 정부 기금을 합쳐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향후 5년간 AI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며, '26년에는 새정부가 1조 원을 우선 투입해 펀드 투자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
- 국민성장펀드는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자본투자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임.
-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산업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어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이재명 대통령 Talk. Talk. Talk

“대한민국은 지금 생존과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인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재도약을 이뤄내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정부도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이 국가의 미래를 여는 주역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첨단 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술 주도 성장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5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축사 중 ('25년 7월 9일)

# 1-2. 경제성장전략 (4/5)

- ② 모두의 성장
- 경제성장전략의 두 번째 축인 '모두의 성장'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5극 3특별(5대 초광역권+3대 특별권역) 전략을 한층 구체화한 실행 방안임. 특히,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지역별 집중 지원과 지역 균형을 토대로 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전략이 담겨 있음.
  - 무엇보다, 지역 균형 기반의 창업·벤처기업 성장이 없이는 진정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새정부는 모태펀드 확대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 계획(안)

서남권(전북·광주·전남)	AI, 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대경권(대구·경북)	로봇, 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중부권(대전·충청)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R&D
강원·제주권	관광, 청정 에너지, 바이오

기업 Check point

지역별로 집중 지원될 성장엔진 산업은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  
따라서, 기업은 향후 발표될 계획 예의주시하여, 각 지역의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기회 모색 필요

##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정책방향) 모태펀드 및 민간 벤처 투자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모태펀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I 등 혁신산업 투자 비중 확대</li><li>역대 최대 출자 규모 및 존속기한 연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혁신기업의 초기 및 스케일업 자금난 해소</li><li>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li><li>지역별 신성장동력 발굴 및 확산</li></ul>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퇴직연금·연기금·개인·금융사·법인 등 민간자금 유입 촉진<ul style="list-style-type: none"><li>퇴직연금: 벤처 투자 허용 및 위험 분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li><li>연기금투자플: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펀드 신설</li><li>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해 개인 투자 접근성 제고</li><li>금융사: 자본 규제 합리화로 벤처투자 활성화 유도</li><li>법인: 벤처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li></ul></li><li>투자 리스크 분산 및 회수시장 활성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벤처투자 저변 확대</li><li>민간 혁신자본 적극 유입</li><li>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및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li></ul>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1-2. 경제성장전략 (5/5)

## ③ 공정한 성장

- 경제성장전략의 세번째 축인 '공정한 성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그에 따른 방향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새정부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술탈취 방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대·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제도 혁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 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기술탈취 대응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만큼, 공정거래 준수와 안전경영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관련 주요 방안		‘산업 안전보건’ 강화 관련 주요 방안	
방안	주요 내용	방안	주요 내용
상생협력 인프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공유제 협력주체 확대</li> <li>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및 지표 고도화</li> <li>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 등</li> </ul>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고용직·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li> <li>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li> </ul>
공정거래 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품대금 연동제 확대</li> <li>불공정거래 신속 구제</li> <li>상생결제 세액공제 연장 등</li> </ul>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시 과징금 제도 도입</li> <li>기관투자자 등 투자 결정 참고위해, ESG 평가에 안전보건 위반 사항 반영</li> </ul>
기술탈취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거개시제도* 도입</li> <li>자료제출명령권 신설</li> <li>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현실화 등</li> </ul>		

\* 법원이 전문가 지정해 현지조사 통해 증거수집 및 피해 입증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

- 경제성장전략의 네 번째 축인 '지속성장 기반 강화'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음.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기업에게 투명한 경영과 주주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동시에, 다양한 투자자 유입과 자본조달 기회 확대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배구조 선진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친화 정책 도입 등 자본시장 혁신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관련 주요 방안	
방안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7/22일 공포) 안착</li> <li>합병가액 산정 시 추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 실질가치 반영하도록 개선</li> <li>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 점검</li> <li>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li> <li>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선임 제한 등</li> <li>임직원·주요 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 의무화</li> </ul>
증시 수요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li> <li>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li> <li>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확대</li> <li>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및 주식시장 재구조화</li> </ul>

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 2-1. 새정부 재정 계획 – 국가 재정 로드맵

- 8월 29일, 새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재정 의지를 보여주는 향후 5년간의 예산인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함.
-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하며, 특히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다른 부문 대비 높은 비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 R&D 예산: '25년 29.6조 원 → '29년 41.4조 원 (약 40% 증가, 연평균 8.8%)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2025년 28.2조 원 → 2029년 36.8조 원 (약 30% 증가, 연평균 6.9%)
- 이는 **AI 등 전략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임. 보건·복지·고용(연평균 6.0%)과 교육(4.0%) 등 사회 분야도 증가하지만, 경제·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경제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재정 구조가 제시됨.
-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략 산업 R&D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기업에 신규 시장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과제를 안길 것으로 예상됨.

새정부,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단위: 조 원 (전년대비 %)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25~'29 연평균 증가율
총 지출	673.3 (2.5%)	728.0 (8.1%)	764.4 (5.0%)	802.6 (5.0%)	834.7 (4.0)	5.5%
보건·복지·고용	248.7 (4.7%)	269.1 (8.2%)	285.5 (6.1%)	300.6 (5.3%)	313.5 (4.3%)	6.0%
교육	98.5 (3.5%)	99.8 (1.4%)	106.0 (6.2%)	110.5 (4.3%)	115.1 (4.1%)	4.0%
문화·체육·관광	8.8 (0.6%)	9.6 (8.8%)	10.0 (4.9%)	10.5 (4.3%)	10.8 (3.0%)	5.2%
환경	13.0 (3.8%)	14.0 (7.7%)	14.5 (3.4%)	14.9 (3.1%)	15.3 (2.7%)	4.2%
R&D	29.6 (11.5%)	35.3 (19.3%)	37.3 (5.8%)	39.4 (5.5%)	41.4 (5.1%)	8.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0.7%)	32.3 (14.7%)	34.0 (5.2%)	35.6 (4.6%)	36.8 (3.4%)	6.9%
SOC	25.4 (△3.8%)	27.5 (7.9%)	28.6 (4.1%)	29.7 (3.8%)	30.1 (1.6%)	4.3%
농림·수산·식품	25.9 (1.8%)	27.9 (7.7%)	28.9 (3.7%)	29.9 (3.3%)	30.5 (2.1%)	4.2%
국방	61.2 (3.1%)	66.3 (8.2%)	69.7 (5.1%)	73.2 (5.1%)	76.2 (4.1%)	5.6%
외교·통일	7.7 (2.3%)	7.0 (△9.1%)	7.3 (3.5%)	7.5 (3.5%)	7.7 (3.0%)	0.1%
공공질서·안전	25.0 (2.3%)	27.2 (8.8%)	28.0 (3.0%)	28.8 (2.9%)	29.5 (2.4%)	4.2%
일반·지방행정	110.7 (0.1%)	121.1 (9.4%)	126.7 (4.6%)	135.1 (6.6%)	141.9 (5.1%)	6.4%

참고: 향후 5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재정운용계획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됨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25년 9월 발표)

# 2-2. 새정부 재정 계획 – 2026년 예산안

- 특히, '26년은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본격 실행되는 원년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AI+에너지 고속도로+5극 3특)와 ABCDE+2S 중심의 전략 산업 육성, 그리고 자본시장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임. 이에 따라, 8월 29일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음.
  - '26년 예산안 726조 원 편성 (전년 대비 8.1% 증가, '25년 673조 원)
  - 다만, 국회의 예산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라, 확정 예산은 추후 확인 필요
- 특히, **AI 3강 체제 구축을 위한 대전환(10.1조 원)과 신산업 R&D 혁신(44.3조 원)에 집중 투자하여, GPU 등 핵심 인프라 확보, 데이터센터 확충, 인력 양성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5극 3특' 전략)을 고려한 지방 거점 클러스터 육성(29.2조 원)도 확대되어, 기업에게는 신규 시장 창출과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회와 과제가 동시에 주어질 전망이다.**

## 새정부 '26년 예산안 (예산 비중 높아진 중점 투자 중심으로 정리)

'26년 총 지출 예산 규모: 728조 원

### 기술선도 성장·공정한 성장 관련 예산안

AI 고속도로 관련		전략산업(ABCDE+2S) 및 R&D 관련	
GPU 1.5만 장 구매	2.1조 원	R&D - ABCDE 첨단기술 고도화	35.3조 원 (역대 최대 증가, 전년대비 +19.3%)
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5조 원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1조 원
AX-Sprint 300**	0.9조 원	수출 바우처	0.2조 원
국내 핵심 인재 1.1만 명 양성 등	0.6조 원	국민성장펀드(5년간 100조 원 이상)	1.0조 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모태펀드 출자	2.0조 원 (역대 최대)
RE100 산단, 분산형 전력망	0.3조 원	K-컬처 연계 산업 붐업(관광, 푸트, 뷰티 등)	3.2조 원
신재생에너지 보조·용자	0.9조 원	콘텐츠 정책 금융	0.5조 원
전기차 전환 지원금	0.2조 원		

\*제조와 바이오헬스, 주택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모두의 성장 관련 예산안

지역 균형(5극 3특) 발전 관련		산재예방, 노동자 보호 관련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지원	0.5조 원	산업재해 예방 필수 설비·인력지원	0.3조 원
지역 필수 공공 의료 확대	1.1조 원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7조 원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0.5조 원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0.5조 원

참고: 위 예산안은 경제성장전략의 4대 축(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가운데 예산 비중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할 필요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25년 9월 발표)

# 3-1. 한일 정상회담

-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후 첫 해외 정상회담으로 일본을 방문함. 과거 정권과 비교할 때 일본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그 배경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자리함.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정부는 일본과 협력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산업 경쟁에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 아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미래산업 공동 대응, 인구·사회 문제 해결 등 다층적 의제를 논의하며, 단순한 외교 회복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수소·AI 등 미래산업 공동 개발, 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 양국 기업 교류 활성화임. 이러한 합의는 **한국 기업에게 규제 완화,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시장 확대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산업 영향 분석

주요 합의 내용	韓 산업 기회 분야	예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li> <li>•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 촉진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 조성</li> </ul>	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li> <li>• 협력 프로젝트 발굴 용이</li> <li>• 규제 완화 및 투자 환경 개선 → 합작·투자 확대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보·경제안보 포함해 각 분야 소통 강화</li> </ul>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안정성 강화</li> <li>• 핵심소재·부품 공동 확보 가능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AI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li> </ul>	AI, 에너지, I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 인프라 공동 개발, AI 기술 표준 협력 → 글로벌 경쟁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제 공동 대응 협의체 출범 (저출산·고령화, 지방활성화 등)</li> </ul>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 산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농업기술 협력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관련 안보 협력 강화</li> </ul>	방산·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 기술 협력, 사이버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li> </ul>

자료: 언론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분석

## 이재명 대통령 Talk. Talk. Talk

“한국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양자 회담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건 처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시기입니다.”

-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中 이재명 대통령 발언

## 3-2. 한미 정상회담 (1/2)

-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짐. 이번 회담은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주요 의제로 삼았으나, 공동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함.
- 이번 회담은 경제·산업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김.
  - 회담 직후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 조선·원자력·LNG·핵심광물·항공 등 11건의 MOU 체결
-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반도체·AI·에너지·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 (7/30일\* 타결)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관세 인하에 따른 반대급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b>15%</b> 로 인하 (기존 25%)	<b>3500억 달러 미국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li> <li>• 1500억 달러: 조선업 대미 투자(선박 건조, MRO 등)</li> </ul>
자동차 관세 <b>15%</b> 로 인하 (기존 25%)	<b>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정부 설명)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li> </ul>
	<b>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b>

\* 미국 현지 시간 기준 (한국 시간으로는 '25년 7/31일 타결)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 및 산업 영향 분석

분야	주요 논의 내용	산업 영향 예상
경제·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정상 차원에서 승인하고, 세부 사항 추후 논의</li> <li>• 한국 기업 1500억 달러 대미 투자</li> <li>•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MOU 준비</li> <li>• 한미 조선업·원전 협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배터리·AI·조선·원전 등 현지 투자 확대로, 미국 시장 진출·수주 경쟁력 강화</li> <li>• 미국 조선업 재건 참여 → 고부가선종·군수 수주 기회 확대</li> </ul>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주한 미군 용지 소유권 거론</li> <li>•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 무기 추가 구매</li> <li>•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착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MR 실증·LNG 장기계약 → 에너지 안정성 확보, 원전 밸류체인 확장</li> </ul>
대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빠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 추진</li> <li>• 북핵·동결·감축·폐기 3단계·접근에 공감대</li> <li>• 미국 피스메이커-한국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사이버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li> </ul>

\*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제시 및 합의된 미국 투자 약속액  
자료: 언론종합, 삼일PwC 경영연구원 분석

## 3-2. 한미 정상회담 (2/2)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조선·원자력·LNG·핵심광물·항공 등 11건의 MOU 발표함.
- 이는 단순한 투자 약속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에너지 안보 강화·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입지 확대와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한미 정상회담 계기 분야별 계약 및 MOU 체결 내용

분야	한국 기업	미국 파트너사	주요 내용
조선업	HD현대, 한국산업은행	Cerberus Capital	• 미국 조선업·해양 물류 인프라 공동 투자펀드 조성 (수십억 달러 규모)
	삼성중공업	Vigor Marine Group	• 美 해군 지원함 MRO,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
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지빌리티	X-energy, AWS	• SMR 설계·건설·운영·공급망 구축
	두산에너지빌리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대형원전 및 SMR 기자재 제작 협력
	한수원, 삼성물산	Fermi America	• 텍사스 AI 캠퍼스 원전, 화력, 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한수원	Centrus	• 우리늄 농축 설비 구축 투자 참여
항공	대한항공	Boeing	•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 (362억 달러)
	대한항공	GE Aerospace	• GE 엔진 구매 및 정비 서비스 계약 (137억 달러)
LNG	한국가스공사	Trafigura, Total Energies	• '28년부터 10년간 LNG 330만 톤 도입 계약
핵심광물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 '28년부터 게르마늄 장기 공급 계약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자료: 언론종합

### 이재명 대통령 Talk. Talk. Talk

“양국(한미)이 ‘윈윈’ 할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합시다. 동시에 양국 간 전략적 투자·구매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 3-3. 한-베트남 정상회담

- 8월 11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응우옌 푸 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가짐. 베트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정상으로,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였음.
- 회담에서는 경제, 인프라, 첨단기술,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산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됨.

#### 한-베트남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 및 산업 영향 분석

주요 합의 내용	韓 산업 기회 분야	예상 영향
<b>교역 규모 확대</b> '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	제조업, 소비재,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 및 사업 기회 창출 가능</li> <li>현지 생산기지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li> <li>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증가</li> </ul>
<b>대규모 인프라 협력</b> (원전·고속철도·신도시 개발)	건설, 플랜트,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확대</li> <li>스마트시티 솔루션, 친환경 건축 기술 수요 증가</li> <li>금융·보험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회</li> </ul>
<b>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협력</b> (AI·바이오·에너지)	AI, ICT,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제조 혁신 및 헬스케어 솔루션 공동 개발</li> <li>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li> <li>기술이전 및 공동연구센터 설립 가능성</li> </ul>
<b>핵심 광물 협력</b>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 기술 결합	배터리, 전기차,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 안정적 확보</li> <li>희토류 가공·정제 기술 협력 강화</li> <li>공급망 리스크 완화 및 장기 계약 기회</li> </ul>
<b>문화콘텐츠 협력</b>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MOU)	K-콘텐츠, 게임, O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 및 공동 제작 활성화</li> <li>저작권 보호 강화로 IP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li> <li>베트남 OTT 플랫폼과의 협업 가능성</li> </ul>
<b>안보·방산 협력</b>	방산·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산 장비 및 기술 수출 기회 확대</li> <li>사이버 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li> <li>국방·치안 협력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 가능</li> </ul>

자료: 언론종합

#### 이재명 대통령 Talk. Talk. Talk

“양국(한-베트남)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 8월 11일, 한-베트남 정상 회담 中 이재명 대통령 발언

## 4. 세제개편, 노란봉투법 (1/2)

### ① 세제 개편

-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기업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함. 이번 개편은 **법인세율 환원(기존 24% → 25%)**, **증권거래세율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AI·반도체·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함. 특히 R&D 비용과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공제 신설 등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새정부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법인세율 환원

'22년 수준으로 환원  
(기존 최고세율 24%  
→ 25%)

과세 표준	세율 (기존 → 개편)
0~2억 원	9% → 10%
2~200억 원	19% → 20%
200~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보유금액 변경

지분율	보유 금액
코스피 1%	(기존) 50억 원
코스닥 2%	↓
코넥스 4%	<b>(개편) 10억 원</b>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

과세 표준	세율
0~2,000만 원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

미래 전략 산업 세제 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제 지원 신설

- AI 신규로 포함해 '8개 분야 78개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30~45%, 대기업  
30~40%

\*국가전략기술 8개 분야 78개 기술

① 반도체 (23개)

⑤ 디스플레이 (8개)

② 이차전지 (10개)

⑥ 미래형운송수단 (7개)

③ 백신 (7개)

⑦ 바이오의약품 (8개)

④ 수소 (10개)

⑧ AI (5개) → 신설

K-컬처 산업 지원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신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등

## 4. 세제개편, 노란봉투법 (2/2)

### ② 노란봉투법

- 국회 통과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이는 **원청-하청 관계, 경영상 의사결정, 파업 대응 방식 등 기업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법안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경과	'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핵심 취지	노동자의 쟁의권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하청 간 교섭권 강화
주요 개정 내용	① <b>사용자 범위 확대:</b> 하청업체 근로자 등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 단체교섭 의무 부과 ② <b>단결권 보장 확대:</b>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 노조 신설·가입 확대 예상 ③ <b>쟁의행위 범위 확대:</b> 조직재편 결정, 권리분쟁도 쟁의 대상 포함 ④ <b>손해배상청구 제한:</b> 노조법상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자료: 고용노동부, 언론종합

####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영향과 대응

삼일PwC 경영연구원 Insight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 대응 전략
<b>사용자 범위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간주 → 원청도 단체교섭·쟁의 대상</li> <li>리스크: 원청의 경영상 결정(하청 교체, 구조조정 등)에 대해 하청 노조가 파업 가능</li> </ul> <b>노동쟁의 대상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결정' 사항</li> <li>개정 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M&amp;A, 투자, 구조조정 등)까지 포함</li> <li>리스크: 전략적 의사결정 지연, 파업 리스크 증가</li> </ul> <b>손해배상 청구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파업 시 기업의 손해청구권 제한, 조합원 개인 책임 축소</li> <li>리스크: 파업 억제력 약화 → 노사분쟁 장기화 가능성</li> </ul>	<b>사용자성 리스크 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청-하청 계약 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재검토</li> <li>하청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방안 마련</li> </ul> <b>단체교섭·노사관리 체계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섭 의무 발생 여부 사전 검토</li> <li>노사협의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li> </ul> <b>법률 리스크 모니터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시행 초기 다양한 해석 가능성 → 지속 모니터링 및 법률 자문 확보</li> </ul> <b>경영상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mp;A·구조조정 등 주요 결정 시 노조 반발 가능성 사전 분석</li> <li>노사 소통 채널 강화로 갈등 예방</li> </ul> <b>파업 대응 시나리오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법·불법 파업 구분 기준 정비</li> <li>불법행위 증거 확보 프로세스 구축</li> </ul>

## 5. 하반기 Focus

새정부는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한국 정부 주도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핵심 주요국들과의 외교 관계 방향 등은 향후 산업 전략과 글로벌 협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함.

### 1. APEC 정상회의

- '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 주도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외교 행사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핵심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10.27~28), 장관급 회의(10.29~30), 정상회의(10.30~11.1)로 구성되며, 동시에 개최되는 APEC CEO 서밋(10.29~31)은 글로벌 기업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의 장으로 기능할 예정임.
-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미국)을 비롯해 시진핑 국가주석(중국), 기시다 총리(일본) 등 주요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 젠슨 황 CEO(NVIDIA)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도 참석할 전망이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됨.
- 이중에서 기업은 APEC CEO 서밋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이번 CEO 서밋에서는 "AI for Economic Development"가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생성형 AI의 산업 적용,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 사이버보안, ESG 전략,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계획임. 특히, 젠슨 황 CEO(NVIDIA)는 서밋에서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산업 적용 전략을 직접 제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됨.

### 2. 향후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및 외교 방향

- 새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AI, 공급망, 제조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조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및 유럽연합 등 한국 경제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방향은 향후 산업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간재·희토류·광물자원 등 핵심 산업군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공급망·투자·안보 대화 채널 복원 등 외교적 복원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러시아·북한과의 협력 강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병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전략적 균형과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외교적 흐름 속에서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 시장 접근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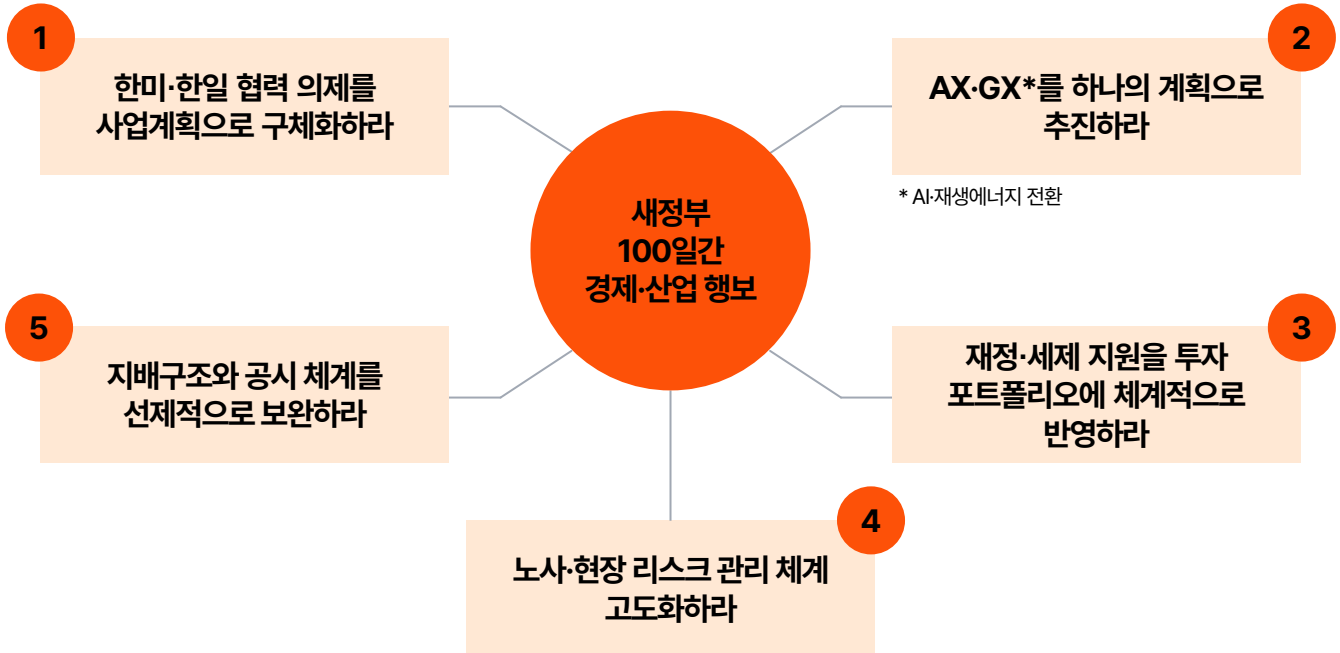
# 6. 결론: 시사점 및 제언 (1/2)

- 새정부는 AI·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국가 성장의 바탕으로 삼고, 반도체·바이오·방산·조선·콘텐츠 등 전략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선언함.
-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100조와 R&D·산업·에너지 예산이 확대되어 신사업 실증과 스케일업의 기회가 커지는 한편,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혁신으로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도 요구될 전망이다.
- 대외적으로는 한미 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MOU, 한일 공급망·표준 협력이 추진되며, 기업에는 미국 현지화와 일본 산업·공급망 협력이라는 이중의 기회도 열렸음. 여기에 더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조·인프라·첨단기술·에너지·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확대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신시장 개척에도 새로운 기회도 열릴 전망이다.
-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과 세제 여건 변화는 노사·재무 측면의 위험을 키우고 있어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100일간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통해 본 기회와 도전과제			삼일PwC 경영연구원 Insight
정책 방향 키워드	기업 기회	기업 도전과제	
AI 전환(AX)	새정부의 AI 인프라(GPU·데이터) 구축 → 제조/서비스 AI 적용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인재 확보 경쟁</li> <li>AI 윤리·보안 규제 준수 비용 증가</li> </ul>	
에너지 전환(GX)	에너지 고속도로·풍력·태양광·SMR 추진 → RE100 대응·에너지 신사업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송전·인허가·수용성 이슈</li> <li>전환기 에너지 비용 상승</li> </ul>	
재정·금융	국민성장펀드 100조·R&D·산업 예산 확대 → 장기자금/저리대출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속도·우선순위 변동</li> <li>보조금 의존 리스크</li> </ul>	
자본시장·거버넌스	코스피5000 목표, 투자자 보호 강화 →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감사위·공시 체계 고도화에 따른 비용 및 노력 필요</li> </ul>	
세제	국가전략기술 R&D·설비 공제 확대 → CAPEX·개발비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세 25%·거래세 인상·대주주 요건 강화 → 세부담/시장 변동성 ↑</li> </ul>	
노동(노란봉투법)	선제적 노사 협력 체계 구축 시 분쟁 예방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하청까지 교섭·쟁의 확대, 손배 제한 → 파업/의사결정 지연 리스크</li> </ul>	
대외- 한미, 한일,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 안정적 공급망 확보 가능성</li> <li>한일 비관세 장벽 해소 → 수출입 활성화 기대</li> <li>한베 교역 확대 및 인프라·첨단기술 협력 → 제조·건설·AI·배터리·콘텐츠 산업 진출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의 세부 이행·정치 변수</li> <li>통상·안보 정책 변동성 관리 필요</li> <li>저작권·기술이전 등 협력 조건에 대한 대응 필요</li> </ul>	

## 6. 결론: 시사점 및 제언 (2/2)

- 지금까지 살펴본 새정부의 100일간 경제·산업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대응 방향을 제시함.



- 1.
  - 한미 간 MOU(조선·원전·LNG·핵심광물·항공 등)와 한일 간 공급망·수소·AI 협력 과제를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 필요
  - 각 프로젝트에 대해 자본 지출, 현지 조달, 인허가, 인력 계획을 문서화하고, 정치·통상 변수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 시나리오 병행
  - 관세와 같은 통상 세부 조건은 미확정이므로, 가정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예의주시 필요
- 2.
  - 생산·물류·설비 운영에 AI를 적용하는 파일럿을 선정하고, 재생전력 조달과 저장(예: PPA, ESS) 방안을 함께 설계
  - 2026~2027년 정부 재정과 성장펀드 집행 일정에 맞추어 실증부터 양산까지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목표 지표를 재생전력 비중, 에너지 단가, 설비 가동 효율, 불량률 개선 등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3.
  - 성장펀드, 보조금, 저리 대출 등 외부 재원을 프로젝트별로 매칭하고, 국가전략기술 R&D·설비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재무 효과를 관리
  -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에 따른 현금흐름과 자본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자금 운용 기준을 고도화
- 4.
  - 원·하청 계약과 의사결정 라인을 점검하여 사용자성 관련 위험을 최소화
  - 교섭 절차와 정보 공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법·불법 파업 구분, 증거 확보, 대체 생산과 재고 운용 등 대응 절차를 표준화
- 5.
  - 이사회 전문성 매칭(기술·재무·ESG·안전)을 재정비하고, 감사위원회 구성과 규정을 정책 방향에 맞춰 고도화
  - 전자주주총회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시·IR 자료의 표준 서식 정착 필요
  - 변동성에 대비하여 배당 정책, 자사주 활용, IR 일정 등 자본시장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사전 공지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살펴본 한국 경제 및 산업의 기회와 도전과제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25.06)**

## Author Contacts

**삼일PwC 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김효진** 연구원

hyojin.h.kim@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9W-RP-099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